

높은 등록금과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

2011.5.11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목 차

1. 들어가는 글 : 등록금 천만원시대
2.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
3. 대학교육의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
4. 글을 마치며



<http://saesayon.org>

요약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계속되어 온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이 50개나 되며, 이미 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목전에 둔 현재, 이와 같은 현실은 대학생들의 생활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와 함께,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이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의 비율은 38.7% 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로 하여금 연평균 천만원 가까운 빚을 발생시키는 4년 동안의 대학교육을 선택하기 쉽지 않게 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 등록금을 저축해 놓은 돈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출을 하더라도 이 후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에게 4년간 4천만원에 해당하는 등록금 대출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대학 4년간의 생활비를 자신의 노동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이의 경우 같은 기간을 취업에 유리한 스펙쌓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대학 졸업 후의 불확실성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처럼 대학 졸업 후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고용상황에서의 높은 등록금은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수준의 양극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며,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반영했을 때 이는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의 높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의 인하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동시에, 소득이 낮은 가구로 하여금 낮은 비용 투입을 통해 대학을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학졸업 후의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대학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나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전체의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고용현실은 대졸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청년고용할당제나 점점 줄어드는 청년층 고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의 개발하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문

1. 들어가는 글 : 등록금 천만원시대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높은 물가상승률이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동안 계속되어 온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 등록금 공시현황’에 따르면 평균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은 지난해 34곳에서 올해 50곳으로 증가했다¹⁾. 등록금 상위 대학들은 추계예대(931만 7천원), 을지대(901만 4천원), 상명대 천안캠퍼스(899만 9천원) 등의 순이었으며, 서울시내 주요 대학 중에서는 연세대(869만 2천원), 이화여대(869만원), 한양대(856만 8천원), 성균관대(850만 8천원), 고려대(846만 천원)가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학의 재학생 중에는 이미 1년에 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있는 이들도 있다. 7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오마이뉴스의 조사에 따르면²⁾, 강남대의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의 경우 1년 등록금이 1,300만원으로 평균등록금으로는 가장 높은 학과로 나타났고, 고려대 의과대학은 1,279만 6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특수학부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연세대의 언더우드 국제학부가 연간 1,420만원으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었다. 의대나 약학대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1,0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받고 있어 이들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이미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등록금 공시현황에 따르면, 평균등록금이 일년에 900만원을 넘는 대학이 2곳, 800만원을 넘는 대학은 50곳이나 된다. 이와 같이 높은 등록금은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때문이다. 특히, 작년과 비교한 올해의 등록금은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국립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률이 0.6%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립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평균등록금을 2.3% 인상하였다. 그 결과 평균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의 수가 지난해 34곳에서 올해 50곳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정부가 제시한 등록

1) 경향신문, “4년제大 등록금 연 800만원 초과 50곳으로 늘었다”, 2011년 4월 29일 기사 참조.

2) 오마이뉴스, “등록금 최고 대학과 적립금 최고대학은?”, 2011년 4월 13일 기사 참조

금 인상제한선 3%보다 많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도 54곳이나 되었다.

지난 2009년 기준 전국 149개 사립대 누적 적립금은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상위권에 있었던 이화여대의 누적적립금이 6,28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3,907억원, 2,305억원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³⁾. 이처럼 대학들은 몇 백억원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재정난과 교육 질을 이야기하며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 아래 등록금을 꾸준히 인상시켜 왔다. 그 결과 현재 대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생활고에 직면해 있다. 가계소득이 둔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처럼 높은 등록금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더 낮은 소비수준의 생활을 감수하게 하며, 생활비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 또한 등록금 대출을 갚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2.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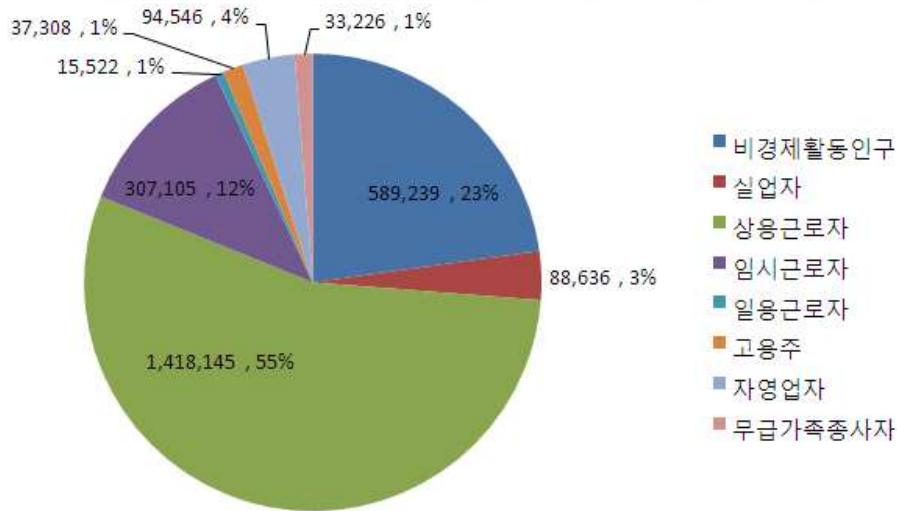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연평균 천만원의 등록금을 4년간 내고 졸업한 이들의 고용상황은 어떨까?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 중 최종학위가 4년제 대학 졸업인 258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258만명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 중 23%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3%는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 즉 고용률은 74%였으며, 이 중에서 174만명이 임금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었고, 16만명이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고용률 74%는 2010년 8월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고용률 59%보다 분명 높은 수치이며, 같은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 중 초등학교 졸업이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의 최종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고용률보다도 높다.

3) 대학정보공개사이트 “대학알리미” 자료 참조

[그림 1] 4년제 대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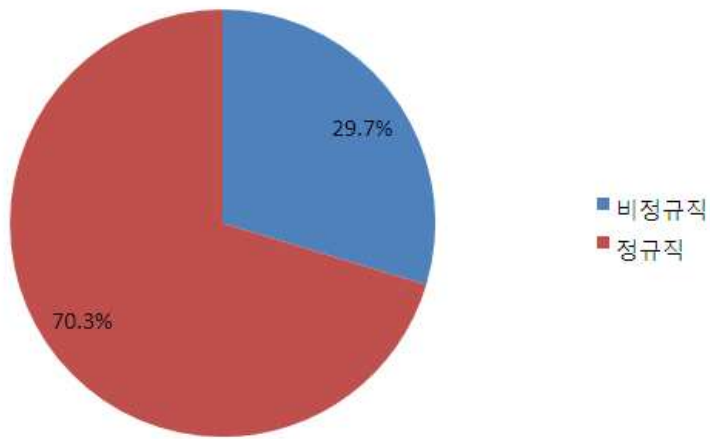
하지만 이는 4년, 혹은 4년 이상을 1년에 천만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26%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 실업률 자체는 3% 밖에 되지 않지만,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노동시장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 니트족이나 켄거루족, 또는 대학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다음해 상반기 취업을 위해 영어점수 등과 같은 자신의 스펙을 높이고 있는 이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26%라는 수치는 상당수의 대졸 청년층들이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또한 일자리를 가진 이들의 고용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했다. 258만 명 중 절반을 조금 넘는 55%에 해당하는 141만명은 1년 이상의 고용계약 관계를 가지는 상용임시직 일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용계약 기간이 1년미만이나 1달미만인 임시직이나 일용직 형태의 임금근로 형태의 일자리를 가진 대졸 청년층도 32만명(1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도 17만명 정도였다.

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서 볼 때 약 30% 가량의 4년제 대졸 청년층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임금근로자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이들의 고용상황에 대해 다시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 임금근로자를 분석한 결과⁴⁾,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의 비중이 29.7%였다. 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 중 47.4%만이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자 중 상당수가 낮은 임금과 높은 고용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의 절반 정도만이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2] 4년제 대졸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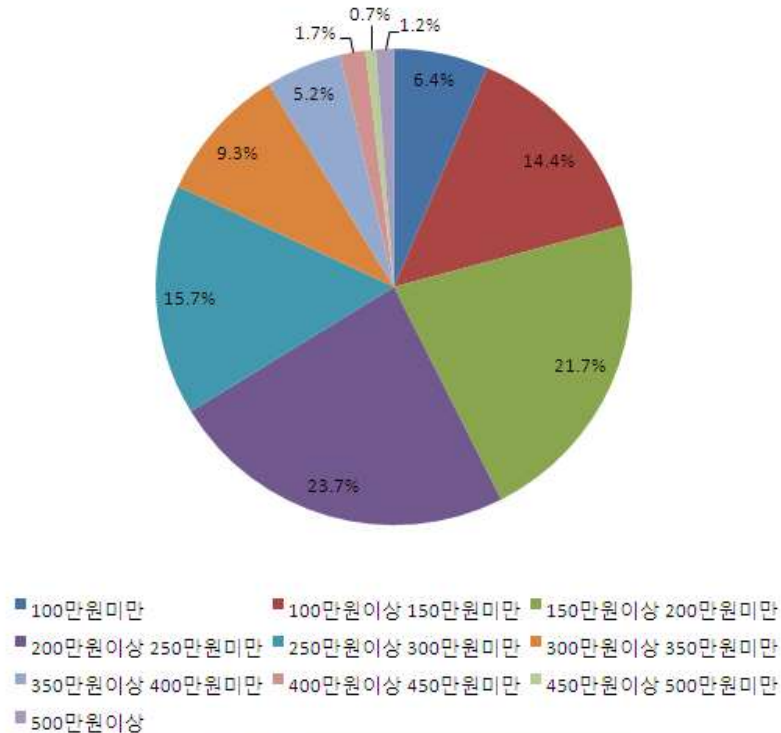
[그림 3]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2010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임금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이들의 평균임금은 213만 5천원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최종학력으로 하는 청년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하지만 임금분위를 나누어 분석했을 때 상당수가 낮은 임금에 직면하고 있었다.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층 258만명 중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174만명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42.6%에 해당하는 74만명은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5세 이상 35세미만 청년층 중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38.7%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⁶⁾. 최근 대졸구직자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4) 김유선 (2011) “2010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월간 노동사회』 1/2월호 참조
 5) 초등학교 졸업이하 청년층의 월평균임금은 115만원, 중학교 졸업 청년층의 월평균임금은 130만 8천원,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의 월평균임금은 159만 9천원, 전문대 등 2년제, 3년제 대학 졸업 청년층의 월평균임금은 178만 6천원이다.
 6) 이는 평균임금으로 초봉이 아니다. 직장경력이 첫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4년대졸 청년층의 초봉을 계산하면 월평균 157만 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68.9%가 200만원 미만의 초봉을 받으며 일하

포털인 알바천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졸구직자의 희망연봉은 2,473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2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현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약 38.7%만이 이 정도의 임금수준을 만족하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그림 3] 임금분위별 4년제 대졸 청년층 임금근로자 비중



이는 4년제 대학의 졸업장이 희망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충분한 보수를 보장해주는 않음을 의미한다. 지금의 청년들은 1년에 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장을 받아도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일자리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현실은 불안정한 청년층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가구빈곤 여부를 분석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의 최종학력을 가진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이 가구주인 가구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각각 8.0%, 8.9%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절대빈곤율은 개인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결정된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로 정의되며, 2010년 보건복

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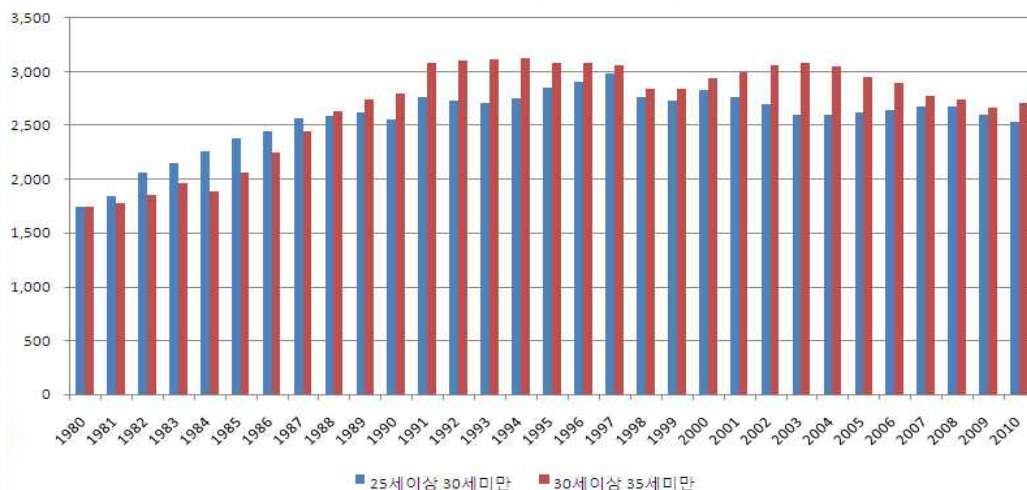
지가족부가 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절대빈곤선으로 하여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절대빈곤선 미만인 가구를 절대빈곤으로 보고 빈곤율을 계산하였다. 상대빈곤은 동일 사회 내의 다른 구성원과 비교해 낮은 소득수준을 가진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서는 OECD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따라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를 상대빈곤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상대빈곤율의 계산에 있어서는 가구원수를 고려하기 위해 균등화 가구소득($= \frac{\text{가처분 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을 사용하였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을 가구주로 두고 있는 가구 중 8~9%가 빈곤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현실은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소득과 일자리의 불확실성이 청년들의 삶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리킨다. 특히, 일을 해도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워킹 푸어 가구의 비중이 5.7%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가구주가 가구의 주된 소득원이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도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대학교육의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

이와 같은 불안정한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에게만 국한된 현실은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고용은 담보상태 내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4] 참조).

[그림 4]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그리고 이러한 고용의 감소는 이들의 고용상황과 생활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사실 청년층 중 상대적으로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다. 이상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과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졸업이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 청년층들의 고용률은 더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더욱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어 더욱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는 학력이라는 간판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좀 더 나은 수준에 있다고는 하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들 역시 일자리에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높은 등록금을 고려하면 이는 향후 대학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 1년에 천만원이라는 높은 등록금은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등록금 대출을 통해 학생 스스로 대학을 졸업한 뒤 일자리를 통해 이를 갚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소득이 낮은 가구의 학생들에게도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안정한 미래는 이러한 선택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등록금이 높아질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은 커지는데, 이 때 미래가 확실하다면 쉽게 등록금을 빌리고 미래에 그것을 갚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4년간 매년 천만원의 등록금을 들여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면 신용불량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 인해 쉽게 대학진학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현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들을 분석했을 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74%였고,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47.4%, 월 평균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비율이 38.7%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졸업 후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구 소득이 낮은 가구의 학생이 4년동안 4천만원의 빚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도 스스로가 과외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어야 할 상황에 있는 학생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높은 토익점수나 높은 학점으로 대변되는 소위

스펙쌓기에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이들의 현실은 미래를 더욱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빈곤에 대한 위험이 아니라 신용불량이라는 아주 큰 위험에 대한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수준에 있는 가구의 자녀들이 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높은 등록금과 일자리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과 대학 졸업 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학진학을 포기하게 될 경우,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4년제 대학 졸업 이하의 학력수준이 최종학력인 경우 월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들은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의 자녀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도 평균적으로 높은 임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지만,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는 신용불량이라는 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이 낮은 일자리를 선택해야 하게 된다면, 이는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와 함께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즉, 높은 대학 등록금과 대학 졸업후 불확실한 미래라는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문제까지도 야기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4. 글을 마치며

최근 높은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다. 대학분관을 점거하거나 삭발을 하는 등 여러 대학들이 모인 집회와 함께 여러 가지 방안으로 높은 등록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이 50개나 되는 지금의 현실은 대학생들의 생활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와 함께, 이상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이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25세이상 35세

미만 청년층의 비율이 38.7%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로 하여금 연평균 천만원 가까운 빚을 발생시키는 4년 동안의 대학교육을 선택하기 쉽지 않게 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 저축해 둔 돈을 통해 등록금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출을 하더라도 이 후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에게 4년간 1년 평균 천만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 대출은 대학 졸업 후 불확실성이 높은 현실에서는 신용불량자란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대학 4년 간의 생활비를 자신의 노동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이의 경우 같은 기간을 취업에 유리한 스펙쌓기를 위해 들이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대학 졸업 후의 불확실성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처럼 대학 졸업 후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고용상황에서의 높은 등록금은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수준의 양극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며,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현실에서 보았을 때 이는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의 높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3% 등록금 인상 제한 정책은 실효성도 없었으며, 현재의 높은 등록금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등록금의 인하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동시에, 소득이 낮은 가구로 하여금 대학교육을 선택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대학졸업 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대학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는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나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막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등록금인하 정책과 함께 대졸 청년층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고용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고용상황이 대졸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는 청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제고 정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많은 청년층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고용할당제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